

## 행정사실무법(제2회)

1.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 7. 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4. 8. 27.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비송사건절차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1.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1. 문제의 소재

#### (1) 논점의 정리

- ①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이 사례의 취소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이 사례에서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후에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 취소심판, 신뢰보호의 원칙, 심리 및 재결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겠다.

###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 3. 신뢰보호의 원칙

####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2) 요건

- 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가 있어야 한다.
- ②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 ③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조치(처리)가 있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3)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 본다.

#### 4. 심리 및 재결

##### (1) 심리

심리의 내용에는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인 요건심리와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한 심사인 본안심리가 있다.

##### (2) 재결

재결의 종류에는 요건재결인 각하재결과 본안재결인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이 있다.

#### 5. 사례의 해결

##### (1) 판단

①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甲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 (2) 결론

따라서 이 사례의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처분취소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문제2.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

###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 2. 업무정지

#### (1) 내용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사가 업무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사유

- ①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 ②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는 때에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 3.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

- ①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정지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3.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사유

#### 1.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 2. 종료 사유

##### (1) 종국재판

- ① 비송사건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된다.
- ② 종국재판이 고지되어 그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된다.

##### (2) 신청의 취하

-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취하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비송사건의 신청도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 ② 신청의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3) 당사자의 사망

- ① 당사자의 사망으로 비송사건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 ②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당사자가 당해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라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하나, 그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송사건절차는 종료한다.

#### 문제4.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1. 서설

###### (1) 과태료의 의의

과태료란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작위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 (2) 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의 2가지 절차가 있다.

②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이 있다.

##### 2. 정식재판과 불복방법

###### (1) 심리

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재판

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3)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3. 약식재판과 불복방법

###### (1) 심리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재판

- 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이의신청

- ①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한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1998. 6. 7. 21: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으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그 시행령 제31조,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여수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실시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도 같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참조),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